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사망자 4700여명 확인

日 전 역사교사 다케우치 광주 방문 '사망자 명부로 본 강제동원 실태' 간담회

'미쓰비시' 120명 등 사망 노무자·군속 동원 고향·작업장 명시

"한국 정부 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역사 부정하는 꼴" 비판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전쟁에 참가하거나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노역에 시달리다 숨진 광주·전남(제주 포함) 사망자가 4700여명(중복 제외)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일본 연구자에 의해 나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사망자의 주소지(본적지 기준)로 분류됐고 이들에 대한 사망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집단희생에 대한 연구자료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30여 년간 일제 강제동원 연구를 한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씨의 발표로 '사망자 명부를 통해서 본 광주전남지역 강제동원 실태' 간담회가 이날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열렸다.

전직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한 다케우치씨는 1971년 일본 후생성이 한국정부에 전달한 '피 징용 사망자 연명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남지역 사망자 명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의 지방 행정기관 자료와 일본 시민단체가 발굴한 자료, 앞서 공개된 출판물 등을 토대로 전국적인 강제동원 사망자 명부를 조사해 사망자의 주소지를 분류하고 사망지를 분석했다.

사망자 별로 이름과 나이, 고향과 사망한 작업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대분류로는 군속과 노무로 분류됐다.

군속은 일제에 의해 끌려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군속 동원으로 사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군속 동원 사망자는 4143명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까지 합하면 호남지역의 사망자 수는 7000여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해군으로 동원된 이들은 일본,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망했다. 북태평양 러시아 사할린섬에서는 1944년 10월 25일 어뢰로 인해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오키시마 섬에서는 해방후 전쟁터에서 돌아오던 중 배가 침몰해 사망하기도 했다. 교전중 사망자도 다수 있었는데 일본군이 전멸했던 사이판, 브라운섬, 마리아나 제도에서 많은 광주·전남지역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미레 섬에서는 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죽임을 당했다.

육군 동원의 경우 육군 지원병이 아닌 수송부(운송부)라고 속아서 전쟁에 동원된 사망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뉴기니아 섬에서 많은 이들이 숨졌고 중국 대륙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무는 강제 노역에 동원돼 숨진 사망자로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명(추정)에 달한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사망자는 1112명이다.

지역별로 본적지 기준 ▲광주 8명 ▲광산 36명 ▲목포 6명 ▲여수 65명 ▲순천 48명 ▲나주 44명 ▲광양 35명 ▲구례 22명 ▲고흥 45명 ▲보성 96명 ▲화순 37명 ▲장흥 62명 ▲강진 32명 ▲해남 32명 ▲영암 31명 ▲무안 50명 ▲함평 27명 ▲영광 49명 ▲장성 58명 ▲완도 33명 ▲진도 24명 ▲제주 185명 ▲시·군 불명 3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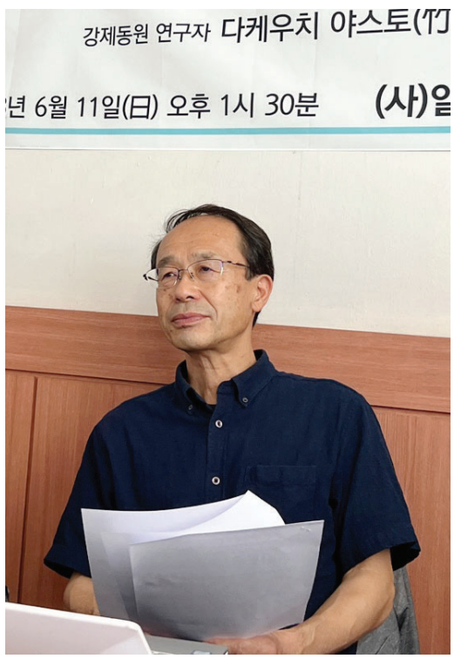
노무로 동원된 이들은 주로 탄광과 비행장, 광산 등지에서 일했고 대부분 군수물품을 만들었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처럼 미쓰비시 사업장에 동원된 전남지역민들은 120명에 달했다.

이들의 사망원인으로는 낙반사고, 탄벽 붕괴, 탄차(석탄 운반 트럭)사고, 발파사고, 지진 뿐 아니라 가슴을 강타하는 폭행까지 다양했다.

간담회에선 후쿠오카 이즈카 탄광에서 희생된 6명의 광주·전남지역민의 신원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의 교회인 영생원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통해 후쿠오카 시민단체가 파악한 것으로 유족에게 유골함의 반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우치씨는 최근 한국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안과 시민모임에 대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등의 압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의 대위변제안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동원 역사 부정을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최근 시민모임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단체의 목적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있는 것인데 단순한 프레임만으로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분열을 조장하고 시민단체를 겨냥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다케우치 야스토씨가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2주기 추모식이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사고현장 일대에서 열렸다. 유가족 대표 이진의씨가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강제추행 택시기사 운전자격 취소 '정당'"

노래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소한 지자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택시운전기사 A씨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목포시 하당동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노래방에서 나온 뒤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목포시장은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들어 A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성 범죄의 위법 정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나 범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운수사업법 등은 과잉금지원칙와 직업자유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법은 불특정의 시민을 상대하는 택시운전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의식 등을 고려한 입법으로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세입자 괴롭힌 건물주 '스토킹 벌금형'

전세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 문자에 주거침입 시도까지

세입자와 명도를 두고 다툼을 벌여오던 새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 '짐 빼고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임영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임차인 B씨에게 10여차례에 걸쳐 '당장 내 집에서 짐 빼고 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28일에는 B씨의 현관문 앞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대답이 없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4월 서울의 한 빌라를 구입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기존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전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받고 당장 나가라'며 문자를 계속 보냈고 B씨는 임대차 만료일인 지난해 6월께 '나갈테니 전세보증금 1억 5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맞섰다.

A씨는 '전세금을 보낸 적도 없으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자를 시작으로 '짐 빼서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10여 차례 보냈다가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했다"면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B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돼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1인 가구 위한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 개소

광주시 서구는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양동 '서구가족센터'에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다가치 커뮤니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다가치 커뮤니티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1인가구 지원 특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20~50대 1인가구 남자 15명, 여자 15명 등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컬러 테라피, 요리 교실, 실내 인테리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밖에도 1인가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1인가구 간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서구와 상무1동, 서구가족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